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19호 (음력 3월 7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부지 판매에서 허가 과정까지 '돼지축사의 수상한 거래'

땅 주인이었다던 '현 산림조합장' 토지등기에 소유권 이력 없어

장성군, 다시 받아줄 분뇨 처음엔 왜 외부위탁 유도했는지 의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잠암마을에 돼지분뇨 악취의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지목받고 있는 A면 소재 돼지 축사(이하 돈사)가 토지 거래 단계부터 허가를 내는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다. 다수의 제보자는 돈사 위치가 평지가 아닌 산등선에 위치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했다는 지적이다.

호남신문은 지난 3월 28일(장성군, 타 지역 위탁한 돼지분뇨 '나 몰라라')와 과 4월 5일(1년 내내 돈사 악취 시달리는 '장성 잠암마을') 돼지악취의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지목된 돈사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다수의 제보자에 의하면 A면 소재 돈사는 토지 거래부터 허가를 내는 과정까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전 소유자는 현재 장성군산림조합장이었다"며 "장성읍농협 퇴비공장자리를 물색하고 있을 당시부터 공무원 등에게 의뢰를 해 '판매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도 했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돈사 업자와 매매조건은 축사 허가를 받아주겠으며 성사가 되면 평당 10만원씩을 더 받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장은 이에 "공무원에게 부탁한 적은 없었고 다만 장성농협에서 땅 일부를 임대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돈들과 함께 구매한 토지를 빨리 판매해 정리를 해야될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산림조합장은 본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매입한 것인가'란 질문에 "내가 돈이 없어 바로 윗 형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형님이 투자하겠다던 돈을 다 사용해 사돈분들과 같이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면적은 30,272㎡(약 9,154평)으로 매입 금액은 총 3억여원이었으며 평당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등기에 소유자 명의를 (사돈들과) 같이 올렸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여기에 '땅을 판매하고 돈사 허가가 나오면 그때 얼마를 더 받겠다느나 조건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장은 인터뷰 도중 "기억이 났다"며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등기에 처음 기재된 소유자는 나 혼자였지만 사돈들이 불안해해 중간에 지분 등기를 다 해줬다"고 말을 바꿨다.

◆"본인 명의였다"고 밝힌 산림조합장, 토지등기에 소유권 이력 없어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토지등기에 산림조합장이 소유권을 가진 이력은 없었다. 다만 조합장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2005년 12월부터 현 돈사업자와 토지를 매매하는 기간 '조합장의 이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2번 명시됐다.

그것도 토지소유권자와 공동으로 채무자로 지난 2008년 6월과 2010년 3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기록이 전부였다. 또한 2005년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000씨는 사돈도 아닌 형님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림조합장은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3억여원의 소지 소유를 누구 앞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장성군, 처리 가능한 업체 분뇨 '왜 타지역 위탁 유도했나'

문제의 돈사가 허가신청한 면적은 5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따라서 장성군에 배정된 수질오염총량제에 한꺼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을 대비해 분뇨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협의 대상이었다.

의문에 휩싸인 A돈사 전경

허가 당시 장성군은 수질오염총량제가 배정치 한계에 도달할 것을 염려해 타지역 위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허가 당시 장성군은 업체가 무안군에 소재한 개인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업체의 재활용신고서에 기재된 주소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현재 해당업체가 처리해 살포한 액비에 잦은 민원이 제기돼 구속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돈사 업체는 무안으로 반출이 어렵다고 판단 장성군은 환경위탁업체에 관내 처리가 가능한지 의뢰해 결국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줬다.

그러나 애초 허가 신청한 8천두에서 발생한 분뇨 등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배당치 한계를 걱정한 장성군은 본지 확인 결과 그 후에도 4곳의 돈사를 신규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A면의 돈사가 최초 허가를 받은 2017년 5월 이후 4곳의 돈사가 기존건물 및 환경영향평가 면적 제외 등의 이후로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허가를 받은 4곳은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이라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이런 실정에 돈사부지 판매 과정부터 신규허가에 변경허가 과정까지 각종 의혹 투성에 대해 제보자들은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범 기자

호남신문은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이슈, 비리 등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062-222-2580

정부 "거리두기 해제 필요시점…위험 변이 나오면 다시 강화"

"엔데믹 선언, 당분간은 어렵다"

정부는 위험성이 높은 코로나19 변이가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현재는 강제적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때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자정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까지 유행이 급증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4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다만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우세종으로 자리잡았고 해외에서는 '델타크론' 등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현재 어떤 변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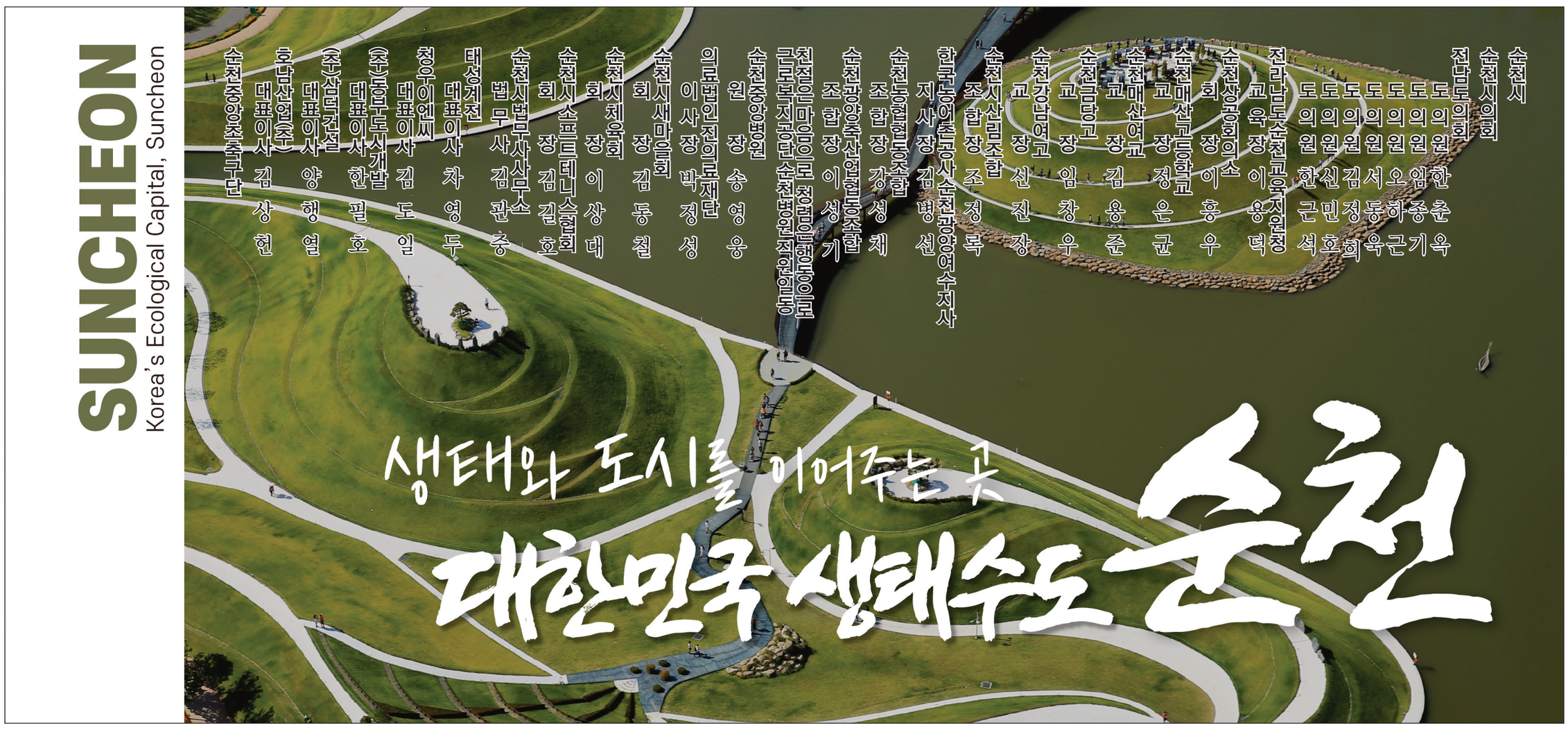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는 우선순위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의료 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마스크 해제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며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의무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여부는 추후 방역 상황을 보며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 대유행(팬데믹) 종료를 의미하는 '엔데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빠르지만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반장은 엔데믹 선언 시점에 대해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엔데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위험성이 낮아져 특수한 체계를 일반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고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